

데스크시각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문재인 정부 위기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데다,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불안 심리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당장 내년 상반기가 고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구조적으로 민생 경제가 갑자기 좋아질 수 없는 데다 북한 비핵화 문제도 쉽게 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1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p, 응답률 7.5%)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7%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9.4%로 40%대에 육박했다.

여기에 세대별·지역별 콘크리트 지지

문재인 정부 신발 끈 고쳐 매야

총으로 평가받던 20대와 호남 민심도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다. 올해 초만 해도 80%대를 넘었던 20대의 지지율은 54.2%까지 곤두박질쳤다. 또 집권 초반 90%대를 넘는 가공할 지지율을 보였던 호남도 75%로 떨어졌다.

이 같은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민생과 경제 곳곳에서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2기 경제 팀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수석 카드를 제시했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그리 강하지 않다는 평가다. 새로운 경제 팀이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 변화 등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고비 오나

한국갤럽이 실시한 경제 전망 조사(11월 6-8일)에서도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해 16%가 '좋아질 것', 53%는 '나빠질 것', 27%는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56%로 '감소 예상'(15%)보다 크게 앞섰다.(보다 자세한 여론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실제로 민생의 현실은 심각하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 임금은 내년에도 10.6%가 더 오르면서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자영업자에 직격탄이 되는 것은 물론 물가 인상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또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좋은 일자리는 말 그대로 '바늘구멍'을 예고하고 있고 집값 등 서민의 주거 환경도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법이 있다면 '조금 더 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다. 협치를 통해 꼬인 정국을 풀어 가야 한다. 개혁의 조급증과 '우리만 옳다'라는 순혈주의적 편협성을 버려야 한다. 개각을 앞두고 진영을 떠나 널리 사람을 구하는 환원 민생의 바다로 뛰어들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통합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능력이 요구된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수구·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조급해 하지 말고, 풀어진 신발 끈을 바르게 조여 매야 한다. 2년 전 흑독한 겨울바람 속에서 촛불 혁명을 이뤄 낸 우리 국민이다. 늘 그랬지만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은 준비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심기일전을 기대한다. /tuim@kwangju.co.kr

촛불 민심이 요구한 '적폐 청산'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라는 혁명적 과제와 한반도 평화라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절호의 기회가 경제 현실에 발목이 잡혀 동력을 잃어 가는 형국이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실감 나는 현실이다.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

이런 상황에서 해법이 있다면 '조금 더 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다. 협치를 통해 꼬인 정국을 풀어 가야 한다. 개혁의 조급증과 '우리만 옳다'라는 순혈주의적 편협성을 버려야 한다. 개각을 앞두고 진영을 떠나 널리 사람을 구하는 환원 민생의 바다로 뛰어들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통합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능력이 요구된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수구·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조급해 하지 말고, 풀어진 신발 끈을 바르게 조여 매야 한다. 2년 전 흑독한 겨울바람 속에서 촛불 혁명을 이뤄 낸 우리 국민이다. 늘 그랬지만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은 준비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심기일전을 기대한다. /tuim@kwangju.co.kr

은펜칼럼



최영대
전남대학교·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끝났다. 결과는 찬성 78.6%, 반대 21.4%로서 찬성이 반대를 크게 앞섰다. 반대 측은 결과에 대한 수용을 선언했다. 16년 동안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논쟁이 종식될 것 같다.

공론화에 임하는 찬·반 양측의 태도는 결연했다. 1년 가까이 풍찬노숙한 반대 측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를 선택이 아닌 선악의 문제로 접근했다. 반면에 찬성측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무산될 경우 대혼란이 오고 이용성 시장이 식물시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간파한 내 주변 사람들은 공론화위원장직이 독배를 든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만 두라

공론화, 이해와 협치의 동력이 되기를

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조언이 눈물나게 고마웠지만 중도에 그만둘 수는 없었다. '공정의 마인드'를 갖기로 했다. 공론화를 수용한 이용성 시장의 선택과 숙의형 공론화를 요구한 시민모임·시민협의 요구 모두 생활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

중간에 좌초위기가 몇 번 있었다. 광주시에 숙의형 공론화의 수용을 촉구하고, 광주시 공무원의 홍보 및 토론 참여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 시민모임은 정보접근과 홍보 분량 및 비용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심지어 공론화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아슬아슬한 국면에서 공론화를 살릴 유일한 길은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었다.

다행히 마지막 단계인 1박2일의 종합토론회는 기대 이상으로 순조로웠다. 토론회에 임한 243명 시민참여단의 태도는 매우 진지했다. 시민참여단의 95.1%는 공론화 결과가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고 대답했다. 민

주도시 광주 시민의 성숙성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반대운동을 주도한 시민모임 측은 투표결과를 보고 울면서도 바로 결과를 수용한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일부 강경파 회원들의 보이콧 주장에 시달리면서도 승패를 떠나 생활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전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도 공론화 결과를 수용한다고 선언했다. 시민모임과 시민협 모두 우리 지역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확인해주었다.

오늘의 소수가 내일 다수가 되기도 하고 오늘 다수가 내일 소수가 되기도 한다. 이제 공은 이용성 시장과 광주시로 넘어갔다. 광주시는 반대 측이 주장한 내용들, 즉 시민의 부담 최소화와 안전한 지하철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 트램, BRT,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중심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주시 바란다.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경청해야 공론화가 진정한 의미의 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의 교감한 협치를 권유한다.

아름다운 꽃밭도 가까이 가서 보면 못생긴 꽃, 시든 꽃 등이 발견된다. 이번 공론화에서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이 왜 없겠는가. 찬성 측 시민모임이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철도공사의 홍보활동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 그러나 광주시 공무원의 관여는 처음부터 금지시키는 게 옳았을 것 같다. 예산이 없어서 그랬지만, 홍보 경비를 찬·반 양측에 모두 부담시킨 것은 문제가 있었다.

공론화가 만능일 수는 없다. 헌법 개정의 국회통과 정족수, 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 다.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이미 시행중인 사업을 공론화에 불일 때는 단순 다수결이 아닌 가중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파괴 염려가 있는 사안 등을 공론화에 불일 경우에도 가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홍보의 주제와 범위,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회, 공론화 매뉴얼 작성, 조례의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기고

꿈같은 3D 프린팅 주택

진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0년에는 3D 프린팅 기술은 응용한 '개인용 맞춤형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최초로 중국, 네덜란드 등이 보유중인 기존 '실내 모듈형 출력 방식'을 국산화해 소형 건축물(100㎡) 기준 골조 공기 60% 단축을 위한 3D 설계 기술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D 프린팅 주택은 어떤 집을 말하며, 어떻게 지어질까? 3D 프린팅 주택은 컴퓨터로 설계 도면을 만들어 그 도면 데이터를 3D 프린터에 전송하면 4m에 이르는 로봇 팔이 건축 자료를 쌓아 올리고 액체 상태의 특수 시멘트 및 접착 자료를 치약 짜듯 건물에 바르는 방식이다.

3차원 도면을 통해 재료를 여러 층의 레이어로 쌓아 올리는 '적층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데, 이 방식은 CAD 소프트웨어로 디자인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구조의 물체든 생산할 수 있다.

원선은 이런 방식으로 3D 프린팅 주택을 건축하면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도 재료를 30~60%, 건축 기간(공기)을 50~70%, 인건비를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3D 프린터로 인쇄한 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디든 원하는 곳에 친환경적으로 건축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부동산 율리 현상도 막을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3D 프린터는 정형화된 주택 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자유 곡선형 이동식 주택도 건축이 가능하며, 자동차와 기계류까지 적용 영역을 넓힐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주목받는다.

선진국의 산업 기술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3D 프린팅 기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 연마를 위해 3D 프린터 운영 기사를 국가 기술 자격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기업과 대학을 연계해 연구 개발비도 투자해야 한다.

현재 대학과 유수한 연구기관들이 큰 틀에서 '뉴 3D 프린팅 주택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어 머지않아 집대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 볼 수 있는 3D 프린팅 주택을 만나게 될 것이다.

꿈같은 3D 프린팅 주택의 완성은 기

술적으로 3D 프린터를 능숙하게 작동하는 능력과 이를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영상 재현 능력을 융합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될 때 가능하다 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3D 프린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 자격증에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이며 3D 프린팅 기술을 교육하는 기관이나 대학 학과에 학생들이 모여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과정 평가형 국가 기술 자격인 3D 프린팅 전문 자격증(웹디자인 기능사,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 등)을 취득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상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혁신 성장은 멀리 있지 않다. 혁신을 이뤄내면 산업과 기술이 살고, 일자리가 생겨난다. 그래서 혁신 성장의 다른 말은 소득 주도 성장이다.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의 3D 프린팅 기술을 부러워만 하지 말자. 우리도 관련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을 자립화하고 발전시켜 3D 프린팅 기술을 역으로 수출해보자.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며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 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해본다.

社說

'잠자는 예산'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전남 도내 일선 시군들의 올해 재정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기간이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잠자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시군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의 올해 재정 집행 실적을 파악한 결과 전체 예산 15조 2368억 원 가운데 63.8%인 9조 7165억 원만이 집행돼 아직까지 5조 5203억 원이 남아 있다. 목표치 72.1%, 전남도 분담 81.8% 등 재정 집행률이 높은 곳도 있었지만, 평균에 미치지 못한 시군이 15곳이나 됐다.

신안군이 59.5%(7071억 원 중 4206억 원)로 가장 낮았고, 곡성군 59.6%(4462억 원 중 2660억 원), 보성군 60.5%(6032억 원 중 3650억 원) 등의 순이었다. 보령과 시군의 실적을 합쳐 비교한 결과 전남도는 69.8%로 전국 시도 중 꼴찌였다. 재정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사업 관련 토지 보상 협의나 용지 매입 지연 등이 꼽혔다.

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과를 제때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녹장 집행은 직무 유기나 다름 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목표에 미달해 전남도의 예산 배정에서 패배를 받은 시군들이 올해도 부진한 경우가 많아 안이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 집행이 지연되면 연말에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곳곳에서 '묻지마 공사판'이 벌어지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늘어나는 비효율을 반복하게 된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재정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고용, 생산, 투자가 최약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지방 재정이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워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송정역 주차장 폐쇄 이용객은 어찌하라고

광주송정역 주차장이 후면 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내년 상반기부터 폐쇄될 예정이라고 한다. 송정역은 하루 2만여 명이 이용하는 만큼 벌써부터 주차대란이 우려된다. 코레일·광주시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송정역 제2주차장이 폐쇄되고 후면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된다. 광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후면도로는 안목 지하차도와 송정 지하차도로는 송정 2차선으로, 제2주차장 부지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에는 코레일이 제1주차장 자리에 주차 빌딩을 착공한다. 이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이긴 하지만, 결국 내년 12월이면 608면에 이르는 송정역 1·2주차장이 모두 폐쇄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면도로 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호타이어공장 측과 토지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완공 시점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애초 코레일의 주차타워 공

사가 시작되기 전 후면 도로 공사를 완공해 임시 주차장 부지로 활용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는 후면 도로 실시 설계 용역 완료가 두 차례나 미뤄지면서 일이 꼬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철도시설공단 측은 "도로계획 부지에 있는 코레일 소유 건물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용역이 늦어졌다"며 코레일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고 있으며, 코레일은 대체 부지 확보 등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광주시의 더딘 행정을 지적하고 있다. 서로 물고 물리며 책임 전가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서는 결국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주차장 전면 폐쇄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사설 주차장들이 주차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어 이용객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들 관련 기관들은 서둘러 만남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옛날에 쌀의 가치는 어디 비견할 데가 없을 정도로 높았다. 쌀 '미'(米) 자를 풀어 보면 팔(八)+십(十)+팔(八)로 이뤄져 있다. 88번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쌀이 완성된다는 의미다. '음식(食)은 곧 밥(飯)'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쌀은 우리의 주식(主食)이었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면서 받은 것도 '공양미 삼백 석'으로 쌀이었다. 한 석(석)이 144kg이니 요즘 쌀값(19만 원)으로 계산하면 1억 원이 조금 넘는 액수다.

가치 기준이 쌀이다 보니 밥이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나

쌀값 단상

35년 전과 물가를 비교하면 쌀이 3.3배 오른 반면 국공립 대학 등록금과 짜장면 값은 12배나 올랐다. 1년 반 사이에 쌀값이 60% 올라 상승 체감도는 높지만 4인 가족이 하루 세끼를 꼬박 먹어도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2940원이다. 이 가격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80kg 기준인 단위도 소비 추세에 맞게 10kg이나 20kg으로 바꿔 비싸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없앨 연론 보도를 찾아보니 40년 전인 1978년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4040만

섬으로 사상 처음 4000만 섬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당시 쌀 생산량은 4170만 섬이었는데, 그중 96.8%를 소비했으니 국민 1인당 연간 136.1kg의 쌀을 먹은 셈이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소비량 61.8kg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쌀값 급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한 가마(80kg)당 19만 원을 넘어서자 일부에서 물가 상승을 거론하지만 농민 단체는 한 공기(100g)에 245원 수준 밖에 안 된다며 최소 300원(80kg 환산 시 24만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독점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신문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